

『CHINA PERSPECTIVE』, 시리즈#1 :
2021 중국 양회(兩會) 브리프



정 치	양갑용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강력한 지도력 희구와 국가주의 확산
외 교	서정경 (서울대학교)	“팬데믹 시기, 내가 리더다! : 위기(危機) 속 기회(機會)를 선택한 중국의 포효(咆哮)”
경 제	이현태 (인천대학교)	코로나 위기를 넘어 경제강국으로? : 중국의 자립적 기술혁신과 쌍순환 전략
사 회	윤종석 (서울대학교)	(포스트) 팬데믹 시기, 중국 사회는 어디로 가는가? : 민생 보장과 지속 발전의 과제



EXECUTIVE SUMMARY

올해 중국의 양회는 예년에 비해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개최되었다. 2021년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 되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또한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번 양회에서 나타난 중국 정치는 ‘신발전단계,’ ‘신발전이념,’ ‘신발전구도,’ ‘민족단결,’ ‘당사 학습과 교육,’ ‘중화민족의 부흥,’ ‘집권 연장,’ ‘세대정치,’ 그리고 ‘국가주의’의 측면에서 주목할만하다. 민족 통합 이념으로서 문화정체성 강조는 당사 학습, 교육과 함께 새로운 사상학습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진핑 주석 집권 연장 관련하여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뉘앙스를 〈정부업무보고〉와 〈14.5 계획과 2035 미래 목표 강요〉에서 찾아볼 수 있다. 후계 구도는 오리무중(五里霧中)이나 세대교체를 통한 세대정치의 변화는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홍콩에서 “애국자의 홍콩 통치”는 중국이 여전히 국가주의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 논쟁에도 불구하고 중국 양회는 경제적, 지정학적 차원에서 한국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언론 브리핑은 그야말로 중국이 코로나-19에 치명상을 입기는커녕 오히려 국제사회를 더욱 자국 중심으로 이끌어 나아가겠다는 강력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포효(咆哮)였다. 백신 개발 성공은 중국에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동력을 선사했다. “America is back”을 외치며 자신을 압박하고자 동맹 및 우호국들과 연대할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준동맹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개도국들과 연대해 저항진영을 구축하며, 자국 중심적 국제 규범과 표준을 배태시켜 나가려는 중국의 신규상이 엿보였다. 아울러 상처 입은 자국 국민을 치유하고 올해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연회(宴會)를 무사히 치러 냈다. 안정을 추구하지만 도전도 강해진 중국 외교가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국이 국가 부흥의 중간 시점으로 잡은 2035년까지 한국의 외교노선 및 그 방향이 한반도의 미래 안정 및 번영과 밀접히 연관될 것이다. 미중 간 갈등국면에서 편향보다는 균형을 찾아가는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

양회에서 나온 경제 분야의 핵심 내용은 ‘안정적 성장 유지’와 ‘외부 도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미중경쟁으로 인한 대내외적 위기에 대처하고 2049년 강대국 건설을 위한 장기전에 본격 돌입하고자 한다. 우선 중국은 2021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예상치보다 낮은 ‘6%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사회안정을 위한 신규 고용수를 1,300만 명 이상으로 창출하면서 경제의 질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중국 정부는 ‘자립적 기술혁신’과 ‘쌍순환(雙循環) 전략’도 제시하였다. 이들 전략은 미국이 중국을 글로벌 첨단기술 산업 사슬에서 배제시키려는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다. 중국은 기술혁신 중에서 특히 미중 패권전쟁에 중요한 반도체, 인공지능 등 ‘관건 핵심기술’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쌍순환 전략은 어려워진 해외 진출 대신 강대하고 매력적인 국내시장을 육성하여 첨단기술 요소들의 중국 유입을 촉진하여 기술혁신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다. 한국은 중국의 자립적 기술혁신과 쌍순환 전략이 가져올 장기 파급 효과를 염두에 두고 대중국 전략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사회분야의 경우 중국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중된 복합적·누적적인 충격에 대한 본

격적인 대응의 한 해를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것이 아닌' 코로나의 충격은 사회 측면에서 중국 사회의 '불확실성'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는 여전히 '극복'된 것은 아니며, 특히 사회 측면에서 위기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각종 노력들이 이번 양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핵심적인 대응은 '민생 보장'과 '지속 발전'의 과제다. 중국 사회의 취업 및 고용 안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 향촌진흥과 신형도시화를 통한 지속 발전의 새로운 구도,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 등은 사회 측면에서 중국 정부의 가시적 성과이자, 내부적인 고민과 난점을 드러낸다. 코로나가 가져온 복합적인 충격 하에서, '절대적인 성공'이란 없고 '상대적인 성공'이 있을 뿐이란 지적은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포스트) 팬데믹 이후 중국 사회의 변화를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학술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를 제기한다.

강력한 지도력 회구와 국가주의 확산

양갑용(국가안보전략연구원)

중국 양회(两会)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전국정협 주석도 아닌 바로 시진핑 주석이다. 2016년 ‘핵심’ 지위를 장악한 이후 시진핑 주석은 본인의 이름이 들어간 사상을 제시했고, 이번 양회에서도 14.5 계획과 2035년 미래 목표를 설정하는데도 참여했다. 따라서 당정군(당정군)을 장악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일거수일투족, 그가 한 말은 뉴스 그 자체이다. 그가 강조하는 말이 지침이 되고, 사상이 되어 전략과 정책, 조치로 나타난다. 그 말에 주목하여 이번 양회의 정치적 의미를 찾아보려고 한다.

■ 문화정체성 강화와 민족대단결

3월 5일 전국인대 개막식이 열린 날 오후 시진핑 주석은 네이멍구 대표단 심의 회의에 참석했다. 시진핑 주석은 네이멍구 지역의 전국인대 대표이기도 하다. 시진핑 주석이 네이멍구 지역 전국인대 대표가 된 이유는 빈곤탈출이라는 메시지를 정책의지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특정 이슈에 따라 자신의 전국인대 대표 지역을 선정하는데 시진핑 주석은 네이멍구 지역을 선택했다. 빈곤탈출을 통한 전면소강사회건설의 기초를 다지고, 그 완결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대표단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신발전단계(新发展阶段)’, ‘신발전이념(新发展理念)’, ‘신발전구도(新发展格局)’, ‘민족단결’, ‘당사 학습과 교육’, ‘중화민족의 부흥’ 등을 강조했다. 특히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조한 것이 이채롭다.

시진핑 주석은 “한족은 소수민족과 떨어질 수 없고, 소수민족도 한족과 떨어질 수 없고, 각 소수민족 간에도 서로 떨어질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민족간 통합을 위해서는 정체성을 강화해야 하고, 그 정체성이라는 것이 바로 조국 정체성, 중화민족 정체성, 중국문화 정체성, 중국공산당 정체성, 중국특색사회주의 정체성이라는 것이다. 특히, 문화정체성 강조에서 “문화정체성은 가장 심연의 정체성으로서 민족 단결의 뿌리이며 민족 화목의 영혼”이라는 수사적 표현이다. 문화정체성 강화를 통해서 민족단결을 꾀하겠다는 의지로 읽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 중국의 정치생활에서 문화 관련 논의가 심화할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정체성의 강화는 당사 학습과 교육의 강조로 이어졌다. 문화정체성 강화 움직임에서 당사(党史)의 학습과 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과목이 일선 교과과정에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7일 칭하이성 대표단 심의 회의에서는 신중국사, 개혁개방사, 사회주의 발전사 외에 당사를 추가하여 네 가지 역사 학습과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양회 직후 공청단 등 여러 기관이 당사 학습과 교육에 대한 발언 내용을

학습하자고 독려하고, 여러 당정 관련 홈페이지에 당사 학습 관련 서비스가 시작한 것을 보면 당사 학습과 교육은 분명 중국 전체에 새로운 ‘바람(風)’이 될 것이다. 14.5 계획에서 시진핑신시대중국 특색사회주의사상연구센터(원)를 만든다는 것을 명시한 것도 유사한 맥락이다.

■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 가능성

이제 더 이상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대해서 조야를 막론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집권 연장이 사실로 간주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집권을 연장할까?”라는 의구심보다는 오히려 집권 연장을 기정사실화하고 몇 년 연장할까에 더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방증하듯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활동은 활발했고,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으며, 확신에 차 있었다. 다만 중국 정치 변화의 패러다임에서 보면 관행의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중국 정치에서 새로운 시도라는 것이 대부분 과거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최고 지도자를 예우하는 관행도 이번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리커창 총리가 보고한 〈정부업무보고〉에서 시진핑 주석 이름은 12번 언급되었다. 다만 그 몇 배나 되는 분량인 〈14.5 계획과 2035 미래목표 강요〉에서는 겨우 7회 등장할 뿐이다. 이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정부업무보고〉에서 ‘시진핑’이라는 용어는 총서기나 주석으로서 개인을 지칭하는 표현이 8회 등장하고 나머지 4회는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라는 표현으로 등장한다. 즉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업적과 성과를 언급할 때 반드시 개인 이름을 호명하여 그 절대적 지위와 리더십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 개인적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사상의 이름을 호명하는 횟수보다 많다는 점은 그만큼 지도자로서 개인 권위가 여전히 존중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예를 들어 2020년 업무 회고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시진핑 총서기가 직접 지휘하고”, “시진핑 주석 등 당과 국가 지도자의 노력”, “시진핑 강군사상” 등에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호명했다. 특히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표현은 다섯 번이나 반복되었다. 수사적인 표현에 의하면 시진핑은 여전히 핵심이고, 핵심이어야 한다. 양회는 이러한 호칭이 새삼스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14.5 계획과 2035 미래 목표 강요〉에서는 모두 7회 ‘시진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시진핑 강군사상”과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시진핑 개인을 지칭하는 표현 외에 다섯 번 모두 “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즉, 〈정부업무보고〉에 비해서 〈14.5 계획과 2035 미래 목표 강요〉에는 몇 배나 되는 분량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라는 표현이 적게 나타나고, 그마저도 사상의 이름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차이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이번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집권 연장과 관련한 실마리를 찾아내는 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14.5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다. 그리고 〈2035 미래 목표 강요〉는 올해부터 15년이다. 그렇다면 5년 집권 연장 가능성을 〈14.5 계획〉이 끝나는 시점으로 가정할 수 있을까? 20차 당대회는 2022년, 21차 당대회는 2027년 개최 예정이라는 점에서 중간에, 예컨대 20차 당대회 이후 20기 5중전회가 열리는 2025년에 〈14.5 계획〉 종료와 함께 시진핑 주석의 연장 임기도 종료되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최고 지도자가 임기 중간에 그만둔 사례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말고는 현실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사례는 장쩌민 전 주석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관행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임기 연장과 관련하여 이번 <정부업무보고>와 <14.5 계획과 2035 미래 목표 강요>에서 시진핑 주석을 개인 신분으로 언급한 것과 사상의 체현자로서 사실상 사상 명칭으로 언급한 것의 차이가 시진핑 주석의 임기 연장 관련하여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 이번 양회의 새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 정치의 세대정치 유산 때문이다.

■ 안개속 후계구도와 세대정치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후계구도 안착을 전망할 수 있는 유력한 차기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았다. 후춘화(胡春华)와 순정차이(孙政才) 양자 경쟁 구도는 일찍이 순정차이 낙마로 현실화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후춘화의 단독 후계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2018년 3월 전국인대는 당의 의견을 수용하여 국가주석 두 번 이상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버렸다. 그러나 총리 연임 제한 규정은 손 대지 않았다. 당과 국가기구 개편에 따른 시진핑 주석을 향한 권한 집중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포스트 시진핑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주었다. 이 같은 우려는 순조로운 권력 이양이라는 중국적 정치 관행의 변화를 의미한다. 당연히 체제안정의 리스크를 유발한다. 시진핑 주석으로 권력 집중은 대부분 시진핑 주석 개인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중국 정치는 최고 지도자의 교체도 중요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정치를 체화하는 세력들도 매우 중요하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치가 일정한 틀 내에서 예측 가능성을 보여온 것은 바로 리더십의 교체가 세력 교체라는 정치변화를 추동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당정(党政)을 이끌고 있는 이른바 당과 국가 지도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1955년 전후에 태어난 이른바 '50후' 세대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정치는 세대별로 10년 주기로 중국의 정치 변화를 이끌어왔다. 우리가 세대정치(世代政治)로 부르는 용어가 바로 10년 주기 세대교체다. 즉 세대교체를 통해서 세대정치가 현장에서 구현되어 왔고 세대정치는 세대교체를 통해서 생명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확실한 후계 주자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도에 있을 20차 당대회에서 세대교체를 기반으로 하는 세대정치가 작동할지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다. 그 일단이 바로 이번 양회를 통해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양회에서 성급(省级) 성장(省长)이나 주석(主席), 시장(市长)에 오른 15명의 새로운 인물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각 성급 당위원회 서기와 함께 지역 대표단을 이끌고 전국인대 회의에 참석했다. 산시성(陕西省) 성장 자오이더(赵一德), 칭하이성(青海省) 성장 신창싱(信长星), 푸젠성(福建省) 성장 왕닝(王宁), 톈진시(天津市) 시장 라오귀원(廖国勋), 저장성(浙江省) 성장 정자제(郑栅洁), 광시장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주석 란텐리(蓝天立), 지린성(吉林省) 성장 한쥘(韩俊), 하이난성(海南省) 성장 핑페이(冯飞), 간수성(甘肃省) 성장 런전허(任振鹤), 후난성(湖南省) 성장 마오웨이밍(毛伟明), 구이저우성(贵州省) 성장 리빙쥘(李炳军), 윈난성(云南省) 성장 왕위보(王

予波), 안후이성(安徽省) 성장 왕청셴(王清宪), 쓰촨성(四川省) 성장 왕창(黄强), 헤이룽장(黑龙江省) 성장 후창성(胡昌升) 등이다. 이들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들이 성급 당위원회 부서기를 맡고 있는 이른바 각 성급 당위원회 서기와 함께 차세대 정치, 즉 세대정치를 구성하는 새롭게 부상하는 핵심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15명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1960년대에 태어난 간부들이다. 이 말은 중국 정치 주도세력이 1950년대에서 1960년대로 넘어가는 세대교체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지난 해부터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차쥔(车俊, 전 저장성 서기), 천하오(陈豪, 전 위난성장), 순스강(孙志刚, 전 구이저우성 서기), 두자하오(杜家毫, 전 후난성 서기), 류추구이(刘赐贵, 전 하이난성 서기), 바인차오루(巴音朝鲁, 전 지린성 서기), 위웨이궈(于伟国, 전 푸젠성 서기) 등 현직에서 은퇴한 성부급(省部级) 정직 여러 간부들을 전국인대 여러 전문위원회 부주임 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들이 현직에서 물러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성부급 정직(正职) 재직 연한이 만 65세이기 때문이다. 연령 제한 규정에 따라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교체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세대정치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를 이번 양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부터 만 65세 전후한 ‘50후’ 세대의 은퇴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 빈자리를 ‘60후’들이 채우고 있다. 이는 후계구도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대정치의 근간인 세대구성 간부들이 속속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양회에서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일례로 저장성 서기 신분으로 첫 전국인대에 참석한 저장성 서기 원자쥔(袁家军)의 유창한 영어 인터뷰가 SNS에서 화제가 되었다. 새로운 인물이 주목받는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15명 신입 성급 정부 책임자 가운데 대부분은 성간(省间) 이동이 활발한 간부들이다. 예를 들어 자오이더는 저장성, 허베이성, 산시성 성간 이동 경험을 갖고 있다. 랴오궈쑤은 구이저우성, 저장성, 상하이시, 톈진시 성간 이동 경험이 있으며, 런전허도 후베이성, 저장성, 장수성, 깐수성 등 이동 임직 경험을 갖고 있다. 이밖에 후창성도 쓰촨성, 칭하이성, 푸젠성, 헤이룽장성 임직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성간 이동은 당중앙 조직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당중앙 차원에서 세대교체를 통한 세대정치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번 양회는 확인시켜주었다.

■ 홍콩은 안녕한가

이번 양회의 외부 관찰자들의 관심은 단연 홍콩 선거제도 관련 개편 내용일 것이다. “홍콩인이 홍콩인을 통치한다(港人治港)”의 1997년 홍콩 반환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의 핵심은 절차적으로 입법회 의원 선거와 행정장관 선거에 관련된 숫자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중국 표현대로 “애국자가 홍콩을 통치한다(爱国者治港)”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애(爱)’보다는 ‘국(国)’을 강조하겠다는 것을 한층 강화했다는 데 있다. 물론 대외적으로 홍콩을 대표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다.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1984년 중국이 영국과 협상에서 합의한 원칙, 그리고 50년 ‘고도자치’가 채 20여 년이 지나자마자 ‘개입

을 통한 제한적 자치'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은 '애국자 홍콩 통치'가 '일국양제'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홍콩 일부 세력과 외부세력의 홍콩 내정에 대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지난 송환법 파동, 국가안전법 제정 관련 움직임,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홍콩 선거제도 관련 개편은 사실 '국(國)'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뿐 '인(人)'과 '자치(自治)'의 관점에서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주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홍콩 사회가 자랑하는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는 자칫 국가주의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이번 홍콩 선거제도 개편 관련 일련의 움직임은 바로 이러한 국가주의가 '안녕', '질서', '통일'이라는 이름 아래 보편적인 정서인 '자치'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국가'에도 부정적인 각인을 만들어낼 것이다.

■ 양회와 한국

중국의 3월은 정치의 계절이다.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협상회의는 전국인대보다 오랜 역사의 소산이며 전국인대는 실제 구속력을 가진 법을 만들어낸다는 차이가 있다. 둘 모두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와 내용상에서 큰 차이는 없다. 우리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부문의 이익에 귀 기울이기 때문이다.

양회가 주목받는 것은 과거에 대한 평가, 현재 당면 과제 그리고 미래 임무에 대해서 비교적 정치하게 제시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정에서 정책의 혼란을 막기 위한 선언적 의미의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양회이다. 따라서 우리는 양회를 통해서 중국의 어제, 오늘을 평가할 수 있고, 미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특히, 경제적 관계가 심화하고,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점에서 중국의 변화는 우리의 생존과도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의 현실 인식, 미래 전망, 구체적 정책에 대한 리뷰와 깊은 분석은 우리 미래를 개혁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중국의 5년 미래와 15년 청사진이 제시된 이번 양회를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이다.

“팬데믹 시기, 내가 리더다! : 위기(危機) 속 기회(機會)를 선택한 중국의 포효(咆哮)”

서정경(서울대학교)

올해 양회기간인 3월 7일 개최된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언론 브리핑은 그야말로 중국이 코로나 19에 치명상을 입기는커녕 오히려 국제사회를 더욱 자국 중심으로 이끌어 나아가겠다는 강력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포효였다. “America is back”을 외치며 자신을 압박하고자 동맹 및 우호국들과 연대할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준동맹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개도국들과 연대해 저항진영을 구축하며, 자국 중심적 세계질서를 배태시켜 나가려는 중국의 친구상이 엿보였다. 또한 아울러 상처 입은 자국 국민을 치유하고 올해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종의 연회(宴會)를 무사히 치러 냈다. 안정을 추구하지만 도전도 강해진 중국 외교가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왕이 외교부장은 양회 언론 브리핑 역사상 가장 많은 질의·응답(27개)을 가장 오랜 시간(100분)을 들여 소화했다. 여기에 한반도 이슈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김정은·트럼프 회담이 불거진 2018년 한반도 관련 질의·응답이 22개 중 두 번째 배치됐던 사실과 비교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중국이 보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낮아졌다고 보다는 ‘미국의 압박’과 ‘팬데믹’이 겹쳐진 특수한 시기를 맞이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개도국을 자국 진영화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구상과 큰 그림이 과거 1950~60년대의 재판처럼 오늘날 재강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조금 더 확대된 시선에서 본다면, 올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중국공산당을 비단 중국을 다스리는 합법적이고 유능한 집권세력이라는 점을 넘어, 팬데믹 위기를 맞은 국제사회, 특히 약자를 구원하는 진정한 국제 리더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까지 엿보였다. 특히 이를 위해 이례적으로 시진핑 주석을 총 15번 언급하는 등 장기집권을 위한 기반을 쌓는 모습이 연출됐다.

■ 팬데믹 시기 “나”를 중심으로 국제질서 전열을 가다듬다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줄곧 자신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 및 질서관을 구가해왔다. 그리고 이는 현실 외교의 구체적 노선과 정책의 인식적 기반으로 작용해왔다. 마오쩌둥은 자신이 포함된 인민·민주·평화·반제국주의 진영 vs 반인민·반민주·전쟁·제국주의 진영의 대립적 세계관을 가졌고 시기에 따라 중간지대론, 3개 세계론 등으로 구분했다. 이후 혁명과 투쟁의 시기가 아닌 ‘평화와 발전의 시기’로 규정하던 사오핑의 세계관은 오늘날까지 면면히 지속되고 있다. 구소련 해체 이후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인 미국과의 충돌을 최대한 우회하며 미국 중심적 국제정치경제질서 속에서 고속성장을 이루면서 이제 부흥을 꿈꾸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차이메리카(CHIMERICA)”로 불릴 정도로 미국과 깊은 경제적 상호 의존관계를 맺게 되면서 미국의 압박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것이라 생각했다. 그것이 자신의 순진한 희망사항에 불과했음을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 깨달은 중국은 새로운 전략적 구도를 재정비중이다.

■ 중국몽을 위협하는 주요 모순(矛盾)국가, 미국을 공략하다

리커창 총리가 미국에 점잖게 협력 메시지를 보냈다면, 왕이 외교부장은 양회 공식행사 중에서 유독 주목을 끄는 해외 기자 브리핑을 통해 미국에게 당당한 중국의 모습을 보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자국의 핵심이익에 해당하는 사안에는 작심한 듯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남중국해, 대만, 신장, 홍콩, 티벳 문제에 대한 미국 기자의 질문에 왕이는 “미국은 특하면 소위 민주, 인권의 깃발을 들고 타국의 내정을 멋대로 간섭하여 전 세계에 많은 문제거리들을 만들어낸다. 심지어 혼란을 일으키는 근원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걸 진작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는 앞으로도 안녕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쏘아주었다. 시진핑-바이든 전화통화에서 양국이 관계를 정상 궤도로 복귀시키기로 했으며, 양국이 과거를 버리고 미래를 새로 맞이하길(辭舊迎新) 바란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향후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대만문제에 관해선 전임정부가 “선을 넘고” “불장난했던” 위험한 행태를 철저히 변화시켜서 대만문제를 신중하고도 타당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신과 다른 제도를 모욕하거나 압박하거나 심지어 유아독존을 고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제도 패권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와 같은 강경모드는 과거 공식 석상에서 미국을 가능한 자극하지 않으려 했던 태도와 구별된다. 바이든 취임 관련 중국내 미중관계에 대한 초기의 기대심리는 최근 다소 신중세로 돌아섰다. 공식적으로는 미국에게 협력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중미관계의 안정을 희망하지만,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가 수단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트럼프 시기와 대별되지 않는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과 유관하다 볼 수 있다. 즉 미국과 최대한 갈등을 지양하고 협력공간을 모색하지만 핵심이익은 계속 고수하면서도 침해 시 마찰도 불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추종하는 서방세력에 대한 강경 발언도 이어졌다. 미국 등 일부 서방국가들이 “자유항행” 깃발을 들고 남중국해에 빈번하게 오가는 유일한 목적은 남중국해 평화를 깨뜨리고 역내 안정을 혼란케 하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도 유럽에게는 강한 협력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미국의 반중진영 참여를 방지하려는 모습이었다. 향후 당근을 제시하며 유럽과 미국의 틈새를 파고들 것이란 점이 읽히는 대목이다.

■ 자국 공헌 강조 : 미국이 아닌 내가 진정한 공헌자

이번 양회 브리핑을 통해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진정한 세계의 리더이자 공헌자임을 다각도로 부각시켰다. WTO 가입 20주년 관련 질문에 왕이는 중국의 WTO가입은 경제적 글로벌화에 강한 동력을 제공해주었고, 전 지구적 가치사슬의 발전과 최적의 자원배분을 촉진시켰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WTO 가입이 전 세계에 공동번영을 가져다 주었음을 강조함으로써 WTO 가입 이후 중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체제의 최대 수혜자라는 기존의 보편적 견해를 뒤집고자 했다.

또한 그는 미국과 협력영역으로 팬데믹 대응, 경제 부흥, 기후변화 세 가지 의제를 제시했다. 이처럼 중국이 나서서 전 세계의 공동 난제를 미국과 함께 해결하자고 제시한 것인데 이는 중국이 스스로 자신을 적극적으로 G2 입지에 올린 것이다. 이는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 회자된 G2 담론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팬데믹 위기를 맞아 오히려 정체성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러시아와는 연대 강화, 인도 및 일본과는 마찰 지양

중러관계에 대한 질의·응답이 두 번째 순서에 배치됐다는 사실은 미·중 구조적 갈등과 경쟁 시기 중국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연대에 사활을 걸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포스트 팬데믹시기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기존의 준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면서 강대국 게임의 주요 자산인 백신을 둘러싸고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도와 일본에 대해선 협력을 중용하며 최대한 마찰과 충돌 가능성을 줄이려는 모습이였다. 여기에는 국경충돌을 겪긴 했지만 중국 정부 및 기업의 투자와 원조에 의존하는 인도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비교적 소극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일본도 경제 및 올림픽 등에 대한 고려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상황이 존재한다. 왕이는 미국의 대중 압박 진영에 편입하지 말라는 시그널을 보냄과 동시에 양자 간 소모전을 최대한 지양함으로써 전선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였다.

■ 글로벌 거버넌스 : “내”가 주도하는 국제 규범, 표준, 체계

주지하듯 코로나 19의 우한 발발로 인해 중국은 초기에 큰 위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자국산 백신 개발을 계기로 중국은 오히려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에서 자체적 규범과 표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왕이는 첫 번째 질의응답 전, 팬데믹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거론하며 “단 한 국가라도 바이러스로 고통받으면 국제사회가 계속 단결해서 대응해야 하며, 단 한 사람이라도 감염되면 우리는 그를 도와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가 악화된 자국을 오히려 팬데믹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 국제사회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정의롭게 대응하는 국가로 부각시키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저개발국과의 연대

왕이 외교부장이 언급하고 있듯이 중국은 아프리카, 아세안 국가, 라틴 아메리카의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백신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방역을 적극 지원하는 일종의 보건 일대일로(健康一帶一路)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미국 등 서방 중심의 글로벌거버넌스를 팬데믹을 계기로 중국의 이익이 더욱 관철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이다. 중국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을 논해왔다. 이를 위한 “공평”과 “효율”을 주장하는데, 이때 공평은 개도국 특히 약소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제무대에서의 대표성과 발언권 제고의 문제로, 효율은 각종 난제들에 대한 국제기구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왕이 외교부장은 50년 전 중국의 유엔 지위 회복 시 수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형제들의 환성을 언급하며 그들과의 유대감을 강조했다. 또한 유엔은 강대국의 클럽이 아니고 부자의 클럽은 더더욱 아니라고 밝히는 등 개도국 편에 서는 자국 이미지 시현에 치중했다. 이는 유엔을 중심으로 개도국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미국 등 서방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 글로벌 공공재 제공 능력 확보

왕이 외교부장은 또한 IOC위원회를 통해 올림픽 선수들에게 백신을 제공할 뜻을 밝혔다. 이는 저개발국에 대한 백신의 유·무상 제공과 함께 신중국 성립이후 중국이 처음으로 패권국이 갖춰야 할 “전 세계의 공공재” 제공 능력을 확보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미중 간 세력전이 국면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단순히 중국의 바이러스 기원설 무마, 악화된 중국의 대외 이미지 개선뿐 아니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에서의 중국의 입지 강화로 이어진다. 특히 왕이의 백신여권 발언 다음 날 중국은 ‘국제여행건강증명서’를 출시했는데 이는 중국 관광객이 경제 회복에 필요한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확산 가능성이 있다. 이미 그리스가 상호 인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국이 고안한 국제 왕래 및 해외 관광산업계의 표준이 포스트 팬데믹 시기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은 또한 방역체계나 사회관리 시스템에 필요한 첨단기술, AI 진단키트나 스마트 도시 건설을 개도국에 지원하며, 이를 통해 중국식 표준, 규범, 시스템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의 권위주의 정권과 중국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중국적 세계질서의 확산을 초래한다. 반면 5G 등 첨단 기술 및 디지털 분야의 국제 규범과 표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은 동맹국과 연대해 자신의 규범과 표준을 중국이 준수하도록 압박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첨단기술이 독재를 정당화하는데 쓰여선 안된다는 입장이므로 향후 미중 간 마찰이 불가피하다.

■ 아세안 분쟁 해결 거버넌스 구축

이 외에도 미얀마 사태 관련 왕이 외교부장의 답변은 중국이 향후 미국의 개입 여지를 차단하며 자신이 주도하는 아세안 분쟁 해결 규범이자 틀을 기획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중재를 통한 건설적 역할” 발언은 중국 외교관들의 필독서이자 왕이저우 북경대 교수의 저작에서 핵심적 개념으로 언급된 “창조적 개입”이 중국외교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국은 1955년 반동회의에서 미얀마, 인도와 함께 제창한 평화공존 5대 원칙에 따라 자국 이익과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권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점차 국력 증강, 미중 경쟁 심화, 확대된 이익관에 따라 타국의 위기 해결에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중이다. 특히 미얀마는 중국의 안보와 인도양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 봉쇄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에 왕이가 미얀마를 “아세안이라는 대가정의 일원”으로 규정하며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공언했다는 사실이다. 내정 불간섭, 만장일치라는 기존 아세안 방식을 준수하면서도 자신이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미얀마 개입 사례와 함께 남중국해 행위준칙의 신속한 제정을 통해 중국은 향후 아세안 국가 간 갈등과 분쟁을 외부 개입 없이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본 틀과 레짐을 구축하고 있다.

■ 창당 100주년을 맞은 중국 공산당 띄우기

중국의 부상에 따라 서방세계와 이데올로기 및 제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질의에 대해 왕

이 외교부장은 2,000년이 넘는 중국의 역사,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군자의 덕, 그리고 “만물은 함께 자라면서도 서로 해치지 않고, 도는 함께 행해져도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萬物并育而不相害, 道并行而不相?)” 는 중국의 전통적 세계관을 제시했다. 그리고 서방국가들도 이러한 중국의 포용적 태도와 수양을 배양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 외에도 마지막 질의 응답에서 왕이는 에드가 스노우를 언급하며 해외 기자들에게 “중국 공산당(중국이 아닌)”을 대할 때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갖지 말고 공정하게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달 후 우한의 국제 행사 소식을 전하며 후베이 시민들이 전 세계 바이러스 전쟁 승리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했다고 치켜 올림으로써 중국 국민들의 자부심 회복을 꾀했다.

이처럼 기자 브리핑에서 중국의 당당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인 것은 상처 입은 민심을 다독이고 공산당에 대한 무너진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왕이 외교부장의 브리핑 이후 관방 언론들은 중국의 강대국 면모를 칭송했고, SNS에서는 자부심을 느꼈다는 대중들의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의 발원, 그리고 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강한 압박이라는 초유의 대 위기를 맞아 중국은 이를 자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려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선택했다. 소위 “백년만의 대전환(世界百年未有之大變局)” 시기를 맞아 내부적 안정을 기하고 외부의 험난한 도전에 응전하려는, 그래서 세계 최강대국 반열에 진입하려는 시진핑 정부의 단호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그러나 한편 매우 절박한 대응이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 중국의 공세적 전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시사점

중국이 기존의 미국 중심적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도국과 함께 잠식하는 과정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국제기구와 제도는 미중 간 구조적 갈등과 경쟁기를 맞아 미국과 서방 vs 중국과 연합한 개도국 및 약소국 간의 치열한 경쟁과 대립의 장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과거 사드사태에서 경험했듯이 미국과 중국 간 갈등국면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은 심각한 안보적, 경제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이 국가 부흥의 중간 시점으로 잡은 2035년까지 한국의 외교 노선 및 그 방향이 한반도의 미래 안정 및 번영과 밀접히 연관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움직임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외교적 습성은 이제 버릴 때가 되었다. 우리에게 있어 최상위의 국가 목표가 무엇인지, 그를 위한 외교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배열돼야 하는지, 글로벌 세력 구도의 변화를 긴밀히 관찰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냉철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세계 10위권의 중견국이자 팬데믹시기 모범국가로서 우리는 미중 간 갈등국면에서 편향보다는 균형을 찾아가는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 제 3지대의 구축을 이끄는 중견 리더국의 위상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코로나 위기를 넘어 경제강국으로? : 중국의 자립적 기술혁신과 쌍순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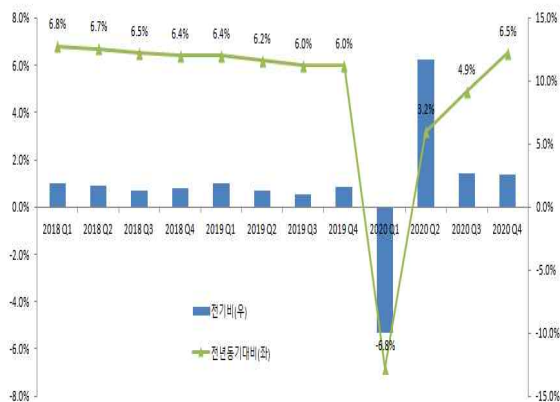
이현대(인천대학교)

올해는 2020년 ‘소강사회(중진국)’ 달성을 선언한 중국이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해이다. 또한 2021년은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일어나는 해이기도 하다. 작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대폭 하락했으나 하반기에 V자 반등에 성공하면서 올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3월 양회에서는 ‘정부업무보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 목표 요강’ 등 향후 중국 경제의 향방을 제시하는 중요 문건들이 쏟아졌다. 양회에서 나온 경제 분야의 핵심은 ‘안정적 성장 유지’와 ‘외부 도전에 대한 적극적 대응’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미중경쟁으로 인한 대내외 위기에 대처하고 2049년 강대국 건설을 위한 장기전에 본격 돌입하고자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양회를 읽는 중요 키워드로 ‘경제성장률 설정’, ‘자립적 기술혁신’, ‘쌍순환 전략 구상’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중국 경제의 방향을 분석하였다.

■ 절묘한 경제성장률 설정: 6% ‘이상(以上)’

중국 정부는 2021년 경제성장률을 ‘6% 이상’으로 설정했다. IMF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 예상치(8~9% 내외)보다 매우 낮은 보수적인 목표다. 중국 경제는 2020년 4분기 성장률 6.5%를 기록하면서 코로나의 충격을 거의 극복했다(그림1). 게다가 2020년 국내총생산이 급감했기에 2021년 성장률은 ‘기저효과(base effect)’로 인해 급상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성장률 목표를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성장률 목표치가 ‘6%’가 아닌 ‘6% 이상(以上)’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6% 이상으로 설정해 놓았으니 실제로는 8~9%가 되더라도 상관없다. 즉, 6%는 최소치이며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아래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림1. 2018~20년 중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그림2. 2016~20년 중국 연도별
경제성장률, 신규고용수



첫째, 2021년 적절한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소 6% 성장이 필요하다는 중국 정부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6% 성장률은 2019년 성장률 6.1%와 유사하다(그림2). 그해 중국은 6.1%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도시 신규고용 1,352만 명을 달성했다. 그러나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성장률은 3.2%, 신규고용은 1,186만 명에 그쳤다. 중국은 매년 900만 명에 이르는 대졸자가 배출되고 수억 명의 농민공이 도시에서 일하는 나라다. 저성장과 저고용이 지속되면 사회불안으로 이어진다. 2021년 재정 정책도 2020년보다는 다소 강도를 낮췄지만 적극적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결국 성장률 최소치 6%는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한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둘째, 중국 정부가 경제 운용을 경제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전환에 중심을 두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목표 성장률은 국내외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신호(signal)의 역할을 한다. 특히 고과(考課)와 승진에 목맨 지방 정부 공무원들이 이에 민감하다. 중앙정부가 높은 성장률을 제시하면 이들도 앞다투어 지역 경제성장률 제고에 발 벗고 나설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중국 경제의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지방 정부 부채증가, 준비 국유기업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환경 오염 심화, 부패 문제 등이 발생한다. 경제·산업 구조조정으로 질적 발전을 이룩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다. 결국 목표치 6%는 중앙이 지방 정부에게 ‘무리하지 말고’ 적절한 성장과 고용을 달성하면서 질적 전환에 힘쓰라는 지시나 다름없다. 리커창 총리가 “올해 기대 목표를 6%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각측이 역량을 집중하여 개혁과 혁신을 추진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라고 부언한 것도 이 때문이다.

셋째, 중국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고 성장률 목표를 낮게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중국은 빠르게 회복하면서 2020년 주요 경제국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중국을 코로나19의 발원지로 비판해 온 미국의 입장에서는 거슬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미중 분쟁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으로서는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고통받고 미중 분쟁도 여전한 상황에서 굳이 깃발을 높게 치켜들 필요는 없다. ‘이상(以上)’이란 표현으로 상한(上限)은 열어두고 6%란 하한(下限)만 설정한 것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절묘한 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는 하한만 있는 열린 목표 설정으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제공하였다. 다만 중국 정부도 고작 6% 달성에 만족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실제로 염두에 두고 있는 성장률은 얼마인가? 류쿤(劉昆) 재정부장의 발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류부장이 제시한 2021년 재정적자율은 3.4%, 재정적자 3.57조 위안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2021년 중국의 명목GDP는 111.6조 위안, 명목GDP 성장률은 8.9%이다. 2021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1.58%(년간)를 기록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에 큰 변화가 없다면 2021년 경제성장률은 7~8%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7%대 성장이 중국 정부가 내심 염두에 두고 있는 경제성장률인 것이다.

■ 더 간절해진 기술혁신 의지: ‘10년에 칼 하나를 갈 듯(十年磨一劍)’

중국 정부가 기술혁신을 강조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지나친 외자기업 및 외국기술에 대한 의존을 경계하고 자립적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전보다 절박하기 때문이다. 미중 분쟁은 반도체 등 미국 중심의 글로벌 첨단기술 네트워크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제 중국은 불가피하게 자립적 기술혁신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 현대화 건설에서 혁신의 핵심적 지위를 견지하고 국가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전략적 버팀목으로 삼을 것”이며 “관건핵심기술에 대한 난관공략전을 잘 치루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리총리는 기초과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0년에 칼 하나를 갈 듯(十年磨一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당나라 시인 가도(賈島)의 시(詩) ‘검객(劍客)’에 나온 구절로서 일견 핵심 기초과학연구의 중장기성과 어려움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중분쟁 속에서 중국이 첨단기술의 검(劍)을 날카롭게 닦아 자신을 펌박하는 미국과 한판 대결을 벌이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검객’의 마지막 구절이 검객이 칼을 꺼내 보이며 ‘어디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있소?(谁有不平事)’로 끝나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여하튼 중국은 자생적 혁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준비하였다. 14.5 계획 기간 국가 R&D 투입 연평균 7% 이상, 2020년 대비 중앙 정부의 기초연구 R&D 지출 10.6% 확대, ‘과학기술혁신 2030년 중점 프로젝트’ 가속화, 국가급 R&D 센터와 혁신시범구 건설, 기업 R&D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제시된 정책들이다. 2015년의 ‘중국제조 2025’와 같이 떠들썩한 목표는 아니지만 모두 내실 있는 방안들이다. 육성 첨단산업과 첨단기술로는 14.5계획의 8대 산업(희토류 등 첨단신소재, 고속철 등 중대기술장비, 스마트 제조 및 로봇기술, 항공기엔진, 베이더우 위성항법시스템, 신에너지 자동차 및 스마트카, 첨단의료장비 및 신약, 농업기계장비)과 2035년까지 완성할 7대 기술(인공지능, 양자정보, 집적회로, 뇌과학, 유전자 및 바이오기술, 임상의학 및 헬스케어, 우주·심해·극지 탐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리총리의 “산업사슬, 공급사슬의 자주적 통제능력을 강화하고”, “산업기반의 고급화와 산업사슬의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언급도 주목해야 한다. 미중분쟁으로 반도체 등 주요 핵심 제품에 대한 글로벌가치사슬(GVC)에서 배제될 수 있기에 중국은 자생적 기술발전을 추진하면서 국내가치사슬(NVC)이나 지역가치사슬(RVC)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중국이 이전처럼 핵심기술이나 글로벌가치사슬에서 서방의 하위 파트너로 남았다면 무리한 기술자립에 나설 필요는 없다. 그러나 2049년 사회주의 강국을 꿈꾸는 중국공산당에게 핵심기술의 자국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인공지능(AI), 빅데이터(BT), 차세대 이동통신(5G, 6G), 반도체, 우주항공 분야 등 ‘관건핵심’ 기술분야에서 중국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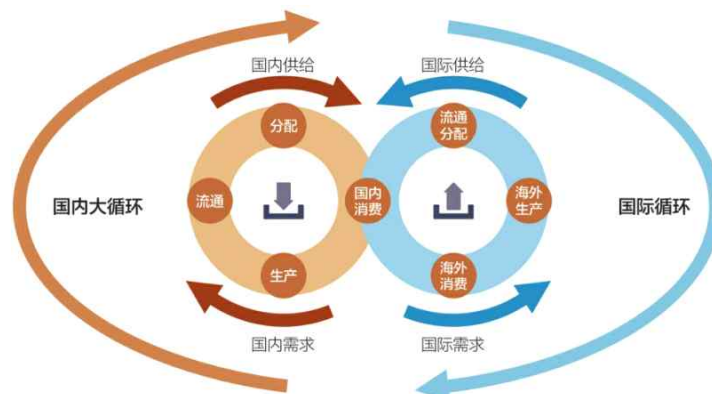
■ 외부 환경 악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쌍순환(双循环) 전략과 중력장(引力场) 강화

리커창 총리는 2021년도 중점업무를 소개하면서 “내수 확대를 계속 전략적 기점으로 삼고 국내시장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내수 확대 전략’ 역시 중국 정부의 오래된 레

퍼토리다. 중국은 이미 12.5계획(2011~15)에서 ‘내수 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밝히면서 특히 소비 진작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친 바 있다. 당시 2007~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세계 수출이 부진하자 내수 진작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보통 오래된 정책 카드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그동안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새로운 환경의 도래로 재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한다. 우선 중국은 13.5계획(2016~20)에서 내수 확대와 관련된 지표인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과 ‘도시민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 달성에 실패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와중에서도 25개 목표 지표 중 단 4개만 달성에 실패했을 만큼 꽤 선방했으나 내수 확대와 관련된 지표 달성에 실패한 점은 뼈아팠다. 그리고 2010년대 초중반과 비교해서 중국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크게 나빠졌다. 주지하다시피 최근 미중 분쟁 등 반세계화 경향이 강화되면서 그간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글로벌 무역·투자(가치사슬)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경향은 필연적으로 내수 확대 전략의 필요성 강화로 이어진다.

다만 중국이 지금 꺼내든 내수 확대 전략은 이전과 크게 다르다. 이는 14.5규획에 대한 리쑹리의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내수확대 전략을 공급측의 구조개혁과 유기적으로 결부시키고 혁신에 의한 발전과 질 높은 공급으로 새로운 수요를 유도하고 창출한다”는 설명은 2015년부터 본격 추진해온 ‘공급측 구조개혁’을 내수확대 전략과 결합시키겠다는 것이다. ‘질 좋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논리인데, 대외경제와의 연결 고리가 약화된 상황에서는 국내 기업이 공급측 구조개혁을 통해서 질 좋은 공급을 해줘야 한다. 이로서 그동안 일견 분리되어 추진된 수요 확대와 공급 개혁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선순환을 형성하고자 한다. 국내 경제의 두 주체-수요와 공급-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국내대순환’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리쑹리는 “국내대순환에 입각하여...글로벌 요소와 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강력한 중력장을 형성함으로써 국내와 국제 쌍순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바로 강대한 국내시장을 강력한 ‘중력장(引力场)’¹⁾으로 활용하여 외부 자원을 끌어들이겠다는 ‘쌍순환’ 전략이다(그림3).

그림3. 쌍순환 개념도



자료: <https://m.hexun.com/news/2020-09-02/201987419.html>

1) 쌍순환 전략에서의 ‘중력장(引力场)’ 개념은 2020. 8월 경제사회영역전문가간담회(经济社会领域专家座谈会)에서 시주석이 처음 제시하였다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20-08/24/c_1126407763.htm).

다소 암호처럼 들리는 이 전략은 중국이 처한 외부 상황과 결부하여 이해해야 한다. 쌍순환 전략은 외부 위기에 대한 중국식 대응이다. 미중 분쟁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악화, 대외투자의 어려움 가중, 고기술 제품의 수입 제한, 첨단산업의 외자 유치 제한 등을 국내대순환 활성화로 만든 강대한 국내시장의 매력으로 극복하겠다는 방안이다. 그간 중국이 첨단기술을 습득하는 주요 방법이 적극적인 해외투자(M&A), 외자기업의 유입, 자체기술 개발이었으나 선진국에 대한 해외투자는 미중 분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은 매력적인 국내시장을 형성시켜 외부에서 스스로 들어오게 하고자 한다. 나가서 취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알아서 들어오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중 분쟁의 본질은 기술 패권 경쟁이기에, 중국은 외부의 첨단기술 요소들을 들여오고자 노력할 것이다. 최근 금융시장 개방, 첨단산업에 대한 외자 우대 조치의 유지 및 강화,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의 축소, 커창반(科創板·과학혁신판) 개설 등의 정책이 이에 부합한다.²⁾ 결국 쌍순환 전략은 외부 환경의 악화 속에서도 자신의 강력한 중력장을 활용하여 외부 요소를 유입시켜서 첨단기술과 산업의 자립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그 중력장이 강대한 국내시장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중국의 전략에 대해 한국은 고민하고 있는가?

중국은 코로나 와중에도 플러스 성장을 거두었다.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이번 양회에서 자신감을 보일만도 하였다. 그러나 총리의 보고는 길지 않았고 과감한 목표치 제시도 찾기 어려웠다. 코로나라는 힘든 산은 거의 넘었지만 갈 길이 그만큼 험난하기 때문이다. 대내외 환경은 여전히 녹록하지 양회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었다. 대내외 환경의 어려움을 안정적 성장 유지, 자립적 기술혁신, 쌍순환 전략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중국의 전략의 성패 여부를 당장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국의 고민은 더 깊어져야 한다. 중국의 자립적 기술혁신과 쌍순환 전략이 가져올 장기 파급 효과를 염두에 두고 대중국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수십 년을 내다보는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과연 어떠한가?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현태(2020), 소강사회(小康社會) 선언 이후 중국은 어디로 가는가? -2020년 중국 경제 현황과 14차 5개년 계획 분석-,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참조.

(포스트) 팬데믹 시기, 중국 사회는 어디로 가는가? : 민생 보장과 지속 발전의 과제

윤종석(서울대학교)

2020년 중국 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복합적인 충격 속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쟁 같은' 대응을 통해 '전염병 방역에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두었고,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을 위한 주요 지표의 대부분을 성취해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중국 사회는 중장기간의, 결코 쉽지 않은 전환의 길목에 놓여져있다.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발전과 전환의 방식이 동반했던 불평등·불공평의 문제, 인민의 기대와 국가 발전에 걸맞는 인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대적 과제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의 고조와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것이 아닌' 코로나-19 팬데믹의 복합적·누적적 효과는 중국 사회의 '불확실성'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2021년 중국 양회(兩會)는 (포스트) 팬데믹 시기 중국 사회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한 포인트다. 2020년 전면적인 소강사회 실현을 선언한 이후 중국 정부의 의도를 '민생 보장'과 '질적 발전'의 과제를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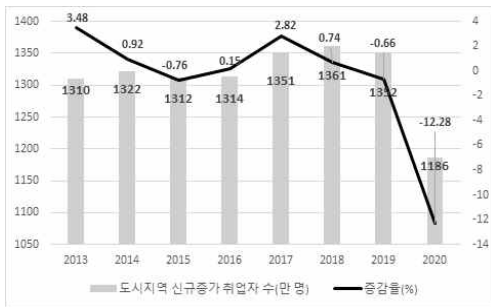
■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코로나

이번 양회는 중국 사회에서 코로나 위기가 여전히 '극복'된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올해 '양회 블루'(양회기간 파란 하늘의 지속)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가장 상징적인 사건으로, 과거처럼 공장 가동 중단 등을 강제할만한 여건이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의 혼란을 '전쟁 같은' 대응으로 무마하고 일상을 상당부분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 문제, 소비 및 가처분소득의 미진한 성과는 중국 사회 또한 팬데믹 이후 회복과정에서의 '양극화 이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제기한다. 중국 정부 또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국내 방역사업에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존재하고, 경제회복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주민소비가 여전히 제약을 받음을 지적했다. 2020년 이 코로나에 대한 긴급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면, 적어도 사회 측면에서는 올해부터 (포스트) 팬데믹 이후 코로나의 복합적·누적적 충격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 진행될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민생 보장의 최우선 순위: 취업 및 고용 안정

이번 양회에서도 취업 및 고용안정은 민생보장의 최우선 순위로 거론되었다. 2018년 7월 처음 제기된 '여섯 가지 안정'(六穩)의 기초 하에서 작년 양회에서 처음 제기된 '여섯 가지 보장'(六保)에서 취업은 가장 우선순위로 꼽혀왔다. 작년 도시 신규취업자 수가 1,186만명, 도시조사실업률 5.2%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지만, 올해 1,100만명 이상, 도시조사실업률 5.5% 이의 목표설정은 팬데믹 이전 1,300만 명 이상의 수치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전망이다.



〈그림 1〉 도시지역 신규증가 취업자수 변화



〈그림 2〉 도시조사실업률 변화 (단위: %)

올해 양회는 기존의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가능한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일자리 안정과 기업에 대한 재정세계·금융 지원, 사회보험료 인하 및 환급, 교육훈련 및 취업서비스 확대, 창업 활성화 등 각종 대책을 지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새로운 취업형태'(新就业)에 대한 강조는 팬데믹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의 취업 및 고용 안정 기조는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IT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노동력 육성 및 공급 또한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도시실업률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보다 일자리 유지에 더 집중된다는 점은 현재적 한계다. 중국 정부는 농민공, 대졸자 등을 중점취업계층으로 선정하고,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기업의 인력채용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대면 서비스업의 고용 충격이 강하다. 농민공 규모는 2020년 사상 최초로 약 866만 명감소했고, 2021년 대졸자 수는 909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의 충격과 중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에 따른 복합적 충격 속에서 향후 농민공, 청년을 중심으로 고용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 지속 발전의 새로운 구도: 향촌 진흥과 신형 도시화

이번 양회에서 또한 주목해야 할 바는 바로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 이후 '향촌진흥'에 대한 강조다. 중국 정부는 2020년 551만 명의 농촌빈곤인구를 탈빈곤시키고, 52개 빈곤현(縣)의 빈곤팍지를 떼내면서 전면적 소강사회 실현을 성취했다. 올해 중국 정부는 향촌진흥 전략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신형 도시화 전략을 보완함으로써 도농 협조·융합발전을 꾀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기존의 성과가 안정적인 지속 발전의 구도로 진입하기 위해 집중 노력을 꾀할 것임

을 강조한다. 향촌진흥 전략을 통해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 농민 소득 증대, 탈빈곤 지역의 지속 발전을 통한 농업생산 증대와 농촌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빈곤에서 탈출한 현 지역에 5년의 과도기를 두고 주요 지원 정책을 통해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중국 정부의 향촌진흥 전략은 도농간, 지역간 불평등의 핵심인 삼농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다. 도시화는 이미 불가피한 추세로 '신형도시화'를 통해 질적 도약을 감행한다면, 남겨진 삼농문제의 해결을 위해 향촌진흥을 통해 중국 사회 전반의 질적 도약과 지속 발전을 꾀하고자 함이다.

확실히 최근 농민·농촌의 사회경제적 환경은 크게 개선되어왔고, 도농간 소득격차 또한 완화되는 추세다. 농촌 산업기반 조성, 인근지역 취업 장려, 귀향 후 창업기반 확충 등이 지속되면서, 코로나로 실직 및 반(半)실업위기에 처한 농민공에게도 우호적 환경을 제공했으리라 추측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향촌진흥이 단순한 산업·경제활동의 측면뿐만 아니라, 농민과 향촌사회, 토지제도의 전환 등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음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향촌진흥과 발전/개발의 이름으로 농촌에 진입하는 각종 자본과 물류 인프라가 가져올 변화가 농촌의 공동화(空洞化), 농촌의 도시에 대한 종속발전의 문제, 경작지 보호 및 식량안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지에 관심이 필요하다.

아울러, 신형 도시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1억 명 농촌인구의 도시민화 등 신형도시화 계획(2013-2020)의 주요 지표를 달성하였고, 도시군, 도시권 발전전략 및 도시재개발을 적극 추동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25년에 인구도시화율을 약 65% 이상으로 상향시킨다는 청사진을 가진 채 도시의 질적 발전을 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난제가 남겨져있다. 특히, 심각한 주거난 문제는 이번 양회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도시화와 더불어 대졸·취업자 및 농민공의 주거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주택은 투기용이 아니라 주거용이다'라는 원칙 또한 재강조되었다. 2018년 양회에서 제기되었던 임대주택은 주택보장체계의 핵심으로 다시 제기되었고, 보장성 임대주택 및 공유재산권 주택의 공급 활성화, 임대주택 세금 부담 완화, 주택임대시장 활성화 및 장기임대시장 규범화 등 방안들이 제출되었다.

■ 부유해지기 전에 늙어버린 중국 사회? 중국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과 인구 문제

중국 정부는 2020년 전국적인 의료보험과 양로보험체계 건립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했고 민생복지를 지속 증진하여 공동부유를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그 동안 구축해온 사회보장체계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학계의 평가도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중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은 취업, 의료, 양로, 교육, 주택 등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어왔다. 2020년 팬데믹 위기 하에서 실시된 다양한 취업 및 고용안정책, 빈곤구제책, 교육·직업훈련체계 완비, 건강 및 공공위생체계 건립 노력, 유연노동력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은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발전성과의 혜택을 보다 많이, 보다 공평하게 모든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란 중국 정부의 설명은 사회안정과 지속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국 사회의 인구 변화, 특히 인구고령화의 문제는 중국 사회 전반이 해결해야 할 가장

근본적이면서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중국의 국가적 차원에서 14억의 인구는 발전의 기반인 동시에, 막대한 부양의 책임이 따른다. 2025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령인구가 3억을, 2033년에는 4억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부유해지기전에 늙어버린'(未富先老)이란 말이 중국 사회에서 회자되어 왔다.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처음으로 총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낮은 출생률과 출산계획 조정, 노동력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정년 연장, 학제개편 및 단축, 청년 취업 및 노인 부양 문제에 대한 관심 또한 집중되었다. 중국 정부는 교육·직업훈련 체계의 제고를 통한 노동력의 질 제고와 노동 및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통한 해법과 동시에, 기존의 기본, 기업 보험에 민영·상업보험을 더한 다층적인 양로보험체계 및 서비스체계건립, 의료와 양로의 결합 등을 통한 노력을 지속할 전망이다.

■ 중국 사회 변화의 함의

중국 정부는 이번 양회를 통해 (포스트) 팬데믹 시기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중국의 '특별한' 성과를 대내외에 펼쳐보였다. 하지만 적어도 사회 측면에서 중국 정부의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구조적·정세적 요인에 코로나의 충격이 가중되면서 2020년 초 중국 사회는 커다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하지만, 그 논란과 충격이 2021년 현재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지나치게 이른 감이 있다.

2021년, 중국 사회는 (포스트) 팬데믹 시기 복합적으로 양산·누적되어온 사회 문제와 더불어 본격적인 씨름에 들어갔다. 현재 코로나는 여전히 '극복'된 것은 아니며, 특히 사회 측면에서 위기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각종 노력들이 이번 양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중국 사회의 취업 및 고용안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 향촌진흥과 신형도시화를 통한 지속발전의 새로운 구도,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 등은 사회 측면에서 중국 정부의 가시적 성과이자, 내부적인 고민과 난점을 드러낸다. 코로나가 가져온 복합적인 충격 하에서, '절대적인 성공'이란 없고 '상대적인 성공'이 있을 뿐이란 지적은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포스트) 팬데믹 이후 중국 사회의 변화를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학술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를 제기한다.

2020년 중국 사회가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나온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남긴 충격은 향후 중국 사회 변화에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동하는 민생 보장과 질적 발전의 노력은 (포스트) 팬데믹 시기 중국 사회의 향방을 보여주는 주요한 청사진으로, 향후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수립될 각종 지표와 실천방안, 이를 둘러싼 사회적·학술적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